

2023.12.20.(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인아 보좌관 (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가맹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 가맹점주단체에 협상권 부여한 가맹사업법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이고, 합리적 대화 통한 상생협력 토대될 것
-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 대리점법·상생협력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에 확대되어야

2023년 12월 20일 (수) 11: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기, 우리 정당·시민단체·중소상공인단체·기관들은 가맹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한 가맹사업법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동일한 취지의 을(乙) 협상력 강화 5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가맹점주단체들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눈물겹도록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2013년 미니스톱 협상을 필두로 미스터피자, 본죽, 편의점 씨유 등 현재까지 40여 건의 집단분쟁에서 합리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하여 수많은 집회, 시위, 농성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8개월 농성기간 동안 2명의 점주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미스터피자, 피자헛, 본죽, 르노삼성, 튼튼영어, 미샤, 던킨, 떡참, 투썸플레이스, 잉글리시에그, 할리스커피 등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해내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점주님의 희생 후에야 배달의민족, 쿠팡과도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의 점주들이 본사와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한 공정한 거래조건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사회 을들은 이렇게 수많은 대가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최소한의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희생들 중 상당수는 합리적인 대화만 가능해도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제도적으로 협상권이 부여되어 마주 앉아 대화만 할 수 있었어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가맹점주를 비롯한 600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에 고용된 500만 노동자와 함께 1,100만이 삶을 이어가는 서민생태계를 구성하여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본사, 독점 대기업 및 온라인플랫폼기업에게 기울어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해서 숨이라도 쉴 수 있기 위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협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등록된 가맹점주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전체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해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 대통령이 공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취지로 대리점주·수탁사업자·중소기업·온라인플랫폼 입점업자에 대해서도 협상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애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관계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소상공인위원회**

[참고자료1] 가맹사업법 정무위 통과안 (등록제, 협상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2제2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는”을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

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3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생략)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u>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u>	② ----- ----- ----- ----- ----- <u>가맹점사업자단체 중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u> -----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u>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u>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u>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u> 1. <u>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u>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

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략)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 제14조의2제3항·제5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같음)

②

제1호 및 제2호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의3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
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3. (현행 제2호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2]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할 을(乙) 교섭권 6법안

- [정무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대안)
 - 단체등록제 · 협상권 도입
- [정무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446 이동주)
 - 단체구성 · 협의권 도입
- [정무위]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 (2109598 민병덕, 2121211 박주민)
 -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10 이정문)
 -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력 강화
- [산자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2110969 우원식)
 - 하도급거래 · 수위탁거래 시 조합의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 포괄적 허용하여 교섭권 보장
- [산자위]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728 이용선)
 - 수탁기업협의회 단결권 및 협의권 강화